일본 기업방재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김양태*
meiji1122@gmail.com
임상혁**
shyim310@dankook.ac.kr

〈目次〉

1. 서론
1.1 연구 목적
2. 기업방재 제 이론
2.1 사업지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2.2 사업지속계획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2.3 회복탄력성과 BCP
3. 일본의 기업 방재 현황
3.1 기업 방재 관련 법체계
3.2 BCP 현황
3.3 동일본대지진과 기업방재의 변화
4. 일본의 기업방재 지원정책
4.1 공적기관의 BCP지원시책
4.2 민간단체의 BCP지원시책
5. 결론 및 시사점

主題語: 일본(Japan), 기업방재(Corporate Disaster), 감재(Disaster reduction), 사업지속성계획(BCP), 사업지속계획관리(BCM)

1. 서론

1.1 연구 목적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한 관계로 재해 원인을 특정화하고 생명·신체와 자산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재(防災)'의 접근 방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의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이후,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따른 공급사슬 단절이 경영현안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일본사회가 그동안 지향해 온 '안전신화'에 입각한 재해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반성에서 언제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감재(減災, Disaster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reduction)'라는 사고에 입각한 재해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업지속성계획(BCP), 그리고 사업지속계획관리(BCM)는 감재(減災) 재해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사업지속성계획이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혹은 피해를 받아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행동순서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사업지속계획관리는 사고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지속시키고 미리 설정한 시간 내에 복구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BCP를 사내에 전개, 침투, 정착시켜 갈 지속적인 활동 사이클을 지칭한다.[1] 현재 일본은 경제 산업성이나 내각부, 중소기업청이 잇달아 BCP 가이드라인 및 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B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가히 '재난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많은 재난이 발생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재난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 약 14,000여 개의 업체가 자연재난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3년 3월 23일「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9일부로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8호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이 발표되어 시행 중에 있다.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업 활동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재해경감법'을 운영하고 있을 뿐 정부주도로 BCP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지원하는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경련 등 그 외의 기업 관련 단체에서도 BCP 보급·확산에 관한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9년 9월 노동부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수립 매뉴얼'을 발표한 사례가 있지만, 매뉴얼의 중심내용은 신종 플루 대유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체계(조직)마련, 대규모 결근 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 운용 계획수립, 사업장 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으로 BCP 본연의 업무중단에 따른 위기관리조직, 위기관리절차 등의 위기관리 방안과 핵심 업무와 기능에 관한 비상 대응 계획 등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BCP 및 BCM 현황 및 BCP 지원정책을 고찰·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경제산업성(2005), pp.2-3
2) 정종수·김호영·송진국(2017), p.15

2. 기업방재 제 이론

2.1 사업지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위험, 위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개념으로 방재(防災) 활동이 있다.[3] 기업방재란 기업이 재난 및 위기에 직면했을 때 종업원, 고객,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자산을 보호하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본래의 기능으로 복귀를 모색하는 전략과 노력을 말한다. 기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폭우, 화재, 지진, 테러, 전쟁,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재해 및 사고에 의한 위험은 비록 그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충격 및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생산이나 영업 등과 같은 경영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 및 준비 등을 통틀어 사업복구 및 재개 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이하 BCP)이라고 한다.[4]

BCP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금융기관에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정지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화재 및 지진 등에 대한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그리고 2001년의 미국동시다발테러가 발생하면서 B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2004년 3월기 결산부터 유가증권보고서에 '사업리스크' 항목이 신설되면서 BCP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4년의 니가타현 츄에쯔지진 및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BCP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고조되었다.[5] BCP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구목표 시간(ROT: Recovery Time Objective)이 설정되어 있어서 목표복구시간에 맞추어 적절하게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2 사업지속계획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사업지속계획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란 기업이 재해 발생 시에도 핵심

3) 방재에는 크게 시간(사전 대책, 재해 직후 대책, 복구·부흥 대책), 공간(글로벌·국가수준, 지역 수준, 존 메시 수준), 주체(공적 섹터, 민간 섹터)등 각각의 시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4) DRII(Disaster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ASIS International, ACP(Association of contingency Planners) 등 재난방지 관련 기관들은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총체적 활동을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비즈니스 연속성계획)로 정립하였으며 영국의 BCI(Business Continuity Institute)는 같은 개념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으로 체계화했다.

5)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13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CM에서 다루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그것이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매우 커서 업무중단 및 기업활동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상정한다. 자연재해, 전쟁, 테러와 같이 극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어 손실을 초래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시 빠르게 대응, 극복하는 사업연속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BCM 도입 효과로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통하여 고객, 주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복구·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거래처, 지역기업과 공적 기관,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BCP 능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일본 내각부는 BCP·BCM 수준의 제고를 위해 연계범위를 '점'(사내의 부문·그룹 간 연계), '선'(거래처 연계), '면'(지역·업계연계) 및 '층'(관공서·지정 공공기관연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6)]

2.3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BCP

회복 탄력성은 재해대응이나 사업 연속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조직(기업)의 회복 탄력성'과 '공급 체인의 회복 탄력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조직의 회복 탄력성에는 위기를 감지하는 감각, 리더의 판단력과 수행력, 원활한 정보 전달력, 적응력 등이 있으며 공급 체인의 회복 탄력성에는 다시 공급자 간 제휴·협력 체제의 구축과 물류 네트워크의 내성으로 구성된다.[7)]

공급자 간 제휴·협력 체제 구축은 자사 단독적인 대책을 넘어 비상시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동업자·협력회사) 등과 연계·협력하는 등의 옵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휴·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사 또는 상대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장소나 기계장치·원재료의 제공을 비롯하여 상호 경영자원을 융통하거나 대체생산을 위탁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며 공급사슬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생산거점이나 협력기업을 포함해 복수의 기업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물류 네트워크의 내성은 대규모 자연재해·사고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수송망이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송 네트워크의 저해요인을 밝혀내

6)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17
7) 콘 마사카즈(2017), pp.19-21

적정재고의 유지나 주요 스톡 포인트(대도시, 지방 소도시의 유통 중계기지)의 분산과 대체, 루트와 수송수단의 저해요인의 다중화(육상·해상·항공 등)대책을 미리 짜놓는 공급사슬 관리가 구축된 것이 중요하다.

3. 일본의 기업 방재 현황

3.1 기업방재 관련 법체계

일본의 재해대책법제는 「재해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재해예방', '재해응급', '재해복구·재건'이라는 재해의 모든 국면을 상정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관민이 연계하여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해를 경험하면서 개정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간의 상호 대응과 함께 주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처 확보,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의 개선 조치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긴급차량 통행 루트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치 차량 대책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일본의 재해대책은 「재해대책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해 '방재기본계획'이 중심이다. 동 계획에 따라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8] 2001년에는 중앙성청 개편에 따라 방재에 관한 행정각부의 시책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방재담당대신'이 새롭게 신설되었다.[9] 방재기본계획에는 재해 발생 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체적으로 ①생명의 안전 확보, ②2차 재해의 방지, ③사업의 계속, ④지역공헌·지역과의 공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자연재해 리스크를 파악하는 동시에 리스크 컨트롤과 리스크 파이낸스의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각 기업은 중요업무의 지속을 위해 BCP를 수립하고 방재체제 정비, 방재 훈련, 내진설계 공사, 자금 확보(손해보험 가입 및 융자 확보), 피해예상 복구 계획 책정, 계획의 점검 및 수정, 라이프라인 대응, 부품 공급사슬 확보 등 사업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BCM을 통해 방재 활동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8) 한국방재협회(2015), pp.57-69

9)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연계 확보를 위하여 내각부에 '정책총괄관(방재담당)'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대규모 재해발생시 대처를 위한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음료수,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의료기관 등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등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추진하는 협정 체결 및 방재 훈련 등의 방재시책에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2 BCP 현황

3.2.1 BCP 도입 현황

대규모 재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정체·중단된다면 그 영향은 개별기업뿐 만아니라 그 지역의 고용·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동시에 공급사슬의 거래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6월 3일 수립된 '국토강인화기본계획(国土強靭化基本計画)'에서는 기업 연계형 BCP·BCM의 구축·촉진 대책이 수립되었다. 동시에 국토강인화추진본부가 결정한 '국토강인화액션플랜2014'에서는 재해발생 시 공급사슬 단절에 의한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비해 공급 사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 연계형 BCP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 내각부가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에 실시한 '기업의 사업계속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BCP책정완료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19%→28%→46%→54%→60%로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은 12%→13%→21%→25%→30%로 나타났다. 아울러 '책정완료' 및 '책정 중'을 합계한 수치와 비교하면 대기업은 35%→58%→72%→73%→75%이며, 중견기업의 경우는 16%→27%→36%→37%→4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다음 <표1>은 정부, 중앙성청(中央省庁),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가 BCP를 도입한 사례이며, <표2>는 민간기업 등이 도입한 사례이다.

<표1> 정부, 중앙성청(中央省庁),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도입

대상	가이드라인의 명칭	책정자	책정시기
정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행동계획	내각관방	2013.6
정부	업무계속계획	내각부	2014.3
중앙성청	중앙성청 업무계속 가이드라인	내각부	2007.6
지방공공단체	지진발생 시 지방공공단체의 업무계속의 입문과 해설서(1판)	내각부	2010.4

자료: 내각부(2014), pp.70-74

10) 내각부 (2017), p.2

<표2> 민간기업의 도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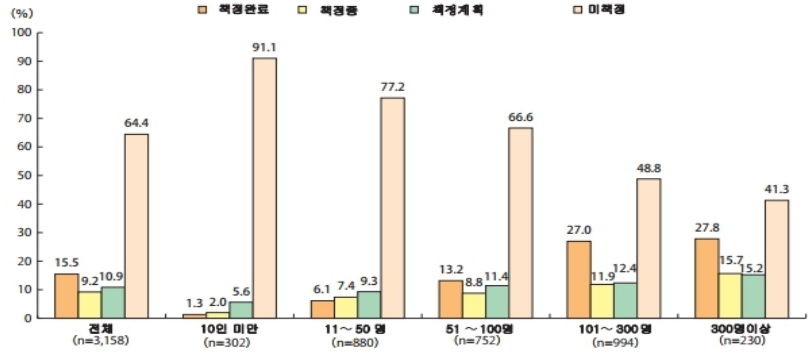
대상	가이드라인의 명칭	책정자	책정시기
기업·조직	사업지속 가이드라인(제3판) -모든 위기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	내각부	2013.8
기업·조직	기업의 사업지속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계훈련의 입문과 해설서	내각부	2012.3
민간기업 등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	내각관방	2013.6
민간기업 등	지방공공단체의 ICT부분의 업무계속계획(ICT-BCP)	총무성	2013.5
금융기관	주요은행의 종합적 감독 지침	금융청	2013.8
	중소·지역금융기관의 종합적 감독 지침		
	보험회사의 종합적 감독지침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종합적 감독 지침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4.1판)	후생노동성	2010.2
식품산업	신형인플루엔자대책-식품산업사업자를 위한 사업지속계획의 책정 및 대처 방안	농림수산성	2009.6
민간기업 등	IT서비스 계속가이드라인(개정판)	경제산업성	2008.6
민간기업 등	사업지속계획(BCP) 책정 가이드라인 -기업의 정보보안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참고자료-	경제산업성	2005.3
중소기업	중소기업BCP책정운용지침 제2판 -긴급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청	2012.3
건설업	토목공사의 일반 경쟁 입찰에 BCP의 항목을 추가	국토교통성	2010.4
하수도	하수도 BCP책정 매뉴얼(지진 편) 제1판	국토교통성	2009.11
은행	재해대응에 관한 BCP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국은행협회	2012.3
손해보험	재해 등 발생 시 행동기본계획	일본손해보험협회	2012.6
증권	회원의 긴급 시 사업지속체제의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증권업협회	2005.6
식품도매시장	BCP 책정의 이미지와 해설(청과시장 도매업)	㈜손보재팬·리스크매니지먼트	2009.12
자동차부품	BC가이드라인(초판)	일본자동차부품협회	2013.3
전기·전자·정보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 BCP책정·BCM 도입의 포인트 -도입사례와 과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정보통신네트워크사업협회	2008.1
상사(商事)	상사 BC가이드라인	일본무역회	2007.11
중소기업	중소기업 BCP Step Up 가이드(4.0판)	사업지속추진기구	2008.11

중소기업	BCP책정 가이드	동경상공 회의소	2013.3
물류	자연재해 시에 대한 물류업의 BCP작성 가이드라인	일본물류단 체연합회	2012.7
건설	건설 BCP 가이드라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설회사의 행동지침-	일본건설업 단체연합회	2012.3
건설	지역건설기업에 대한 재해 시 사업지속의 안내	전국건설업 협회	
트럭운송	중소 트럭운송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대책 가이드 북	전일본트럭 협회	2012.9
부동산	부동산협회 사업지속 가이드라인	부동산협회	2007.11
호텔	지진발생시의 대응활동 지침	일본호텔 협회	2007.11
정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행동계획	내각관방	2013.6
정부	업무계속계획	내각부	2014.3
중앙성청	중앙성청 업무계속 가이드라인	내각부	2007.6
지방공공단체	지진발생 시 지방공공단체의 업무계속의 입문과 해설서(1판)	내각부	2010.4

자료: 내각부(2014), pp.70-74

3.2.2 중소기업의 BCP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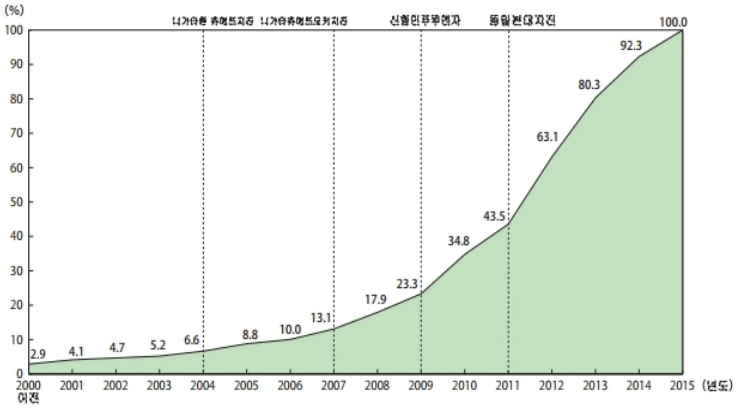
<그림1>과 같이 기업규모별 BCP책정 현황을 보면, BCP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함'과 '들은 적이 있으며 필요함'으로 답한 기업을 합치면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들은 적은 있으나 필요성 없음'과 '들은 적이 없으며 잘 모름'으로 답한 기업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BCP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



자료: 중소기업청(2016), p.239

<그림1> 기업규모별로 본 중소기업의 BCP의 책정 현황

전체적으로는 15.5%의 기업만이 BCP '책정 완료'로 답하고 있지만, 64.4%의 기업은 '책정 미완료'로 답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BCP 책정 노력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술한 BCP 인지도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함'과 '들은 적이 있으며 필요함'이라고 답한 기업이 약 6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BCP를 '책정 완료'로 답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 비율은 낮다.



자료: 중소기업청(2016), p.240.

<그림2> BCP 책정기업의 책정비율(누적비율)

<그림2>는 BCP를 책정한 기업의 책정비율과 주요 재해 발생 시기를 본 것이다. 2015년 시점에서 BCP 책정 완료로 답한 기업을 100%로 했을 때 각 연도의 기업 비율 추이이다. 일본에서 BCP가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2001년 미국 동시다발 테러였지만 실제로 책정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 이후로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지만, BCP를 책정한 기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0년 시점에서도 그 비율은 약 34.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1년 이후에는 65.2%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BCP를 책정한 기업은 증가 경향에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은 BCP 책정 동기 및 배경에 관한 내용으로 '경영층의 경영판단(49.5%)'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객에 대한 공급책임(36.2%)', 모회사(그룹) 요청(29.3%), 리스크 관리 중시의 사풍(23.5), '리스크로 인한 사업 중단 경험(22.2%)', '판매처 요청(18.1%)', '사회적 필요성(17.7%)', '기업이미지향상(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 BCP 미책정으로 답한 기업은 '스킬·노하우부족(49.8%)'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약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BCP가 자사에 불필요하다고 인식하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공급사슬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 회사의 대응은 물론 거래처, 동업 타사와의 연계를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처 요청이 없음' 혹은 '동업타사와의 연계 불가능'이라는 대답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3.3 동일본대지진과 기업 방재의 변화

3.3.1 동일본대지진과 BCM의 확산

동일본대지진은 예상을 초월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도호쿠(東北)지방의 기업 시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고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합재해'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기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11] 동일본대지진 이후, 기업의 위기관리에서 나타난 특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과제, 위기관리와 리더십, BCP 재검토와 BCM의 재구축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과제이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제조기업의 공급사슬이 단절되면서 제조·생산 중단의 파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동북지방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의 부품·소재 기업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이를 대체할 기업의 부재로 인해 대체생산이 곤란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완성품 생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요타 생산방식에 대표되는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지탱하는 유기적인 공급사슬이 외부의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한신·아와지 대지진, 니가타 추에쓰오키 지진에 이어서 동일본대지진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①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가 BCP을 갖추어 피해를 본 이후에도 신속하게 사업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 ②복수의 공급거래처 확보와 대체 장소의 확보, 제품설계와 생산 공정의 재검토 등 여유와 유연성을 가진 공급 사슬을 설계하는 일, ③설계·생산과정의 이관 방안 마련, ④ 동종 타사와의 광범위한 연계·연대를 통해 유사시 원재료 및 수송수단 상호이용 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12]

---

11) 복합재해의 영향으로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①종업원 안부확인의 곤란, ②귀가 곤란 자의 대량발생, ③원전사고와 피난지시(옥내·외 피난, ④피해지 제품에 대한 악성루머, ⑤ 계획정전과 조업정지, ⑥전력부족의 장기화, ⑦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단절, ⑧연료 부족 등이었다.

12) 가메이 가쓰유키·다카노 가즈히코(2012), p.332

둘째, 위기관리와 리더십이다.

동일본대지진에서 드러난 일본 사회의 최대 과제는 위기관리와 리더십 불안정이다. 동경대학의 후지모토 타카히로(藤本隆宏)교수는 일본기업의 강점으로 '강한 현장, 약한 본사'를 지적해 왔는데, 피해지역 현장의 높은 질서의식과 작업수준과 비교하면 사령탑인 정부관청, 대책본부의 대응책은 원전사고 대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뎠다.[13]

셋째, BCP의 재검토와 BCM의 재구축이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에서 평상시의 재해대응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BCM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 계속 가이드라인 제3판(2013)'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BCM는 BCP 책정·유지·갱신, 예산·자원 확보, 교육·훈련, 점검 등 BCP를 지속적으로 실시·개선하는 평상시부터의 관리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BCM은 경영전략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평상시의 대처 방안 수립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책임 및 능동적인 관여, 폭넓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다.[14] 이는 종래의 BCP가 자연재해, 대규모 사건·사고, 공급사슬 단절, 돌발적인 경영환경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복구시키는 방침, 체제, 순서 등을 수립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BCM은 BCP가 평상시부터 잘 운용되도록 하는 관리 활동을 지칭하며 전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3.3.2 중소기업 재해 리스크 대책의 변화

전술한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책 분야는 자금 확보 및 긴급 연락·안부확인 등의 체제 정비에 관해서는 30%를 넘는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0% 전후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기존 리스크 대책에 수정·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표3>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

13) 가메이 가쓰유키·다카노 가즈히코(2012), p.335

14) 아울러 BCM은 사업지속전략의 책정 단계에서 실시되는 위험(리스크)분석과 비즈니스 영향력 분석은 자사의 중요 업무의 중단에 의한 효과(영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표3>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응책

	검토대상 분야	중소기업 대응 사례
①	조달의 분산	· 복수 기업으로부터 주요 원재료 조달 · 대체공급처의 검토 및 확보
②	물류의 재구축	· 대체수송수단 및 운송회사의 선정
③	생산거점의 분산	· 신 공장 건설시, 원격지 확보 · 해외공장에 본사와 동등한 대체기능 부여 · 생산라인의 복선화
④	재고의 수정	· 적정재고량 확보
⑤	표준화·공통화	· 대기업 발주의 의해 제품 제조에 한정적
⑥	판매처의 분산	· 새로운 거래처의 개척 · 특정 소수기업과의 거래 및 의존하는 관계 회피 · 신규 사업 진출 및 고객 개척
⑦	비상시의 설비증강, 데이터의 백업	· 생산설비 및 자재, 기재 고정 · 치·공구의 분산 보관 · 본사와 타 거점과의 데이터 상호보관
⑧	복수기업의 연계에 관한 노력	· 근접 동업타사와 재해 시의 상호지원에 대한 협의 진행 · 원격지 동업타사와 연계 가능한 기업 선정 및 협력관계 구축 · 업종조합 및 상공단체 등의 조직단위로 협력관계 구축
⑨	그 외의 대응	· 긴급연락망 정비 · 위성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확보 · 피난경로 재확인 및 확보 · 피난훈련 내용 수정 및 실시방법 변경 · 긴급 시 대응 매뉴얼 및 규정 책정, 변경

자료: 日本政策金融公庫総合研究所(2013), p.78

4. 일본의 기업방재 지원정책

4.1 공적 기관에 의한 BCP 지원 시책

BCP·BCM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재해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적 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각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도부현별 지진피해상정개요집(2010)'을 발간해 향후 예

상되는 대지진의 피해 및 도도부현 별의 지진 피해 규모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의 'Hazard Map(재해지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시정촌(市町村)을 대상으로 홍수, 해일, 화산 등의 다양한 재해에 관한 '재해지도(Hazard Map)'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4> 중앙성청(中央省庁) 에 의한 지원시책

조직	시책내용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	· 경제산업성은 공급사슬에서 BCP를 공유하기 위한 툴로서 '사업계속능력평가지표'와 훈련 질과 공급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동대응 및 사업계속 대응연습 텍스트' 작성·운영.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BCP보급·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BCP책정운용지침' 작성. 동지침은 기업의 BCP 책정 상황에 따라 코스별로 분류되어 있고 기업 특성 및 현황에 기초한 BCP 책정 및 계속적인 운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 설명.
내각부	· BCP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사업계속계획의 책정·운용촉진에 관한 검토회의 개최. · BCP 보급·확대를 위한 중앙방재회의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한 방재 방향성에 관한 전문조사회'에 대해서 '사업계속가이드라인' 작성. · 2013년에 개최된 제15회 'BCP 책정·운영·촉진방법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BCP보급 상황, 동일본대지진 및 태국 홍수 등의 교훈을 반영해 사업계속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위한 '사업계속가이드라인' 제3판을 공표함.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	· 동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J-Net21'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례 소개. · 전국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자 등을 위한 BCP책정에 관한 세미나 및 BCP작성 실천 강좌 실시. 예를 들면 중소기업대학교 히로시마校에서는 경영자에게 사례 연구를 통한 BCP작성·훈련연습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배우는 연수강좌 개최.

자료: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17

아울러 일본은 중앙 성청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재해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동경도 및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미야기현(宮城県)은 현(県)내의 구체적인 BCP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표5>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시책

조직	시책내용
미야기현	· 宮城県상공회의소연락회 등과 협력·연계해 BCP 책정 및 BCM 시책 지원 · 동일본대지진의 경험 및 교훈을 바탕으로 작성된 '미야기현 긴급 시 기업존속계획 작성순서(제1판)'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미야기 기업BCP책정가이드라인' 작성.
동경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BCP책정지원사업'을 실시. · 공익재단법인 동경도중소기업진흥공사가 BCP 책정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시행 및 BCP 책정 강좌 및 전문가파견(2016년도 부터)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 경제국은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BCP작성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 · '상호 간의 BCP 연계' 구축 (도급공업조합의 BCP 대책을 지원한 결과 보통은 경합관계에 있는 도금 기업이 재해 시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호 물적·인적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
치바현 후나바시	· 후나바시 상공회의소는 시내 사업자의 BCP 책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동경해상일근화재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재팬일본흥아주식회사, 아이아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주식회사 등 3사가 협력해 '후나바시 BCP책정 지원 협정서' 체결 및 연3회 세미나 개최
아이치현 나고야	· 나고야시는 난카이지진의 직접적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기에 중소기업의 BCP 책정에 관한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 · BCP 전문가를 파견해 BCP 책정 지원
시즈오카현	· 지역 실정에 맞는 BCP를 제작·제공, 전문가의 파견에 의한 책정지원, 지도자 육성, 제도융자,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정보교환 및 학술연구의 장을 설치해 중소기업의 BCP 책정을 다면적으로 지원.
기후현	· 자사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기업에 맞는 BCP 책정 및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BCP를 진화시키는 '기후현 모델의 BCP'의 보급 활동 진행. · 기후현 모델 BCP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거점 '기후현 BCP 연수·훈련센터'설치 및 BCP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상담, 각종 세미나 개최, 지속적인 훈련 시행. · '기후현BCP 연구회' 설치·운영

자료: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17

4.2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시책

① 상공회의소·상공회

상공회의소에 의한 BCP 지원시책으로는 일본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BCP내용에 대한 강의 영상 자료'와 동경상공회의소의 'BCP책정 가이드'를 작성·제공하고

다양한 강좌 및 심포지엄을 실시하고 있다.[15)]

② 업계단체

업계단체에 의한 BCP 지원시책으로는 (사)일본금속프레스공업협회의 '독자적인 BCP인정제도 운용 및 BCM시스템 구축을 위한 (JSMA, BCMS구축 틀) 제공, (사)일본건설연합회의 '정부와 연계한 응급활동 담당', '방재업무계획 및 재해 시 초동 대응 핸드북 작성 및 재해대책본부 구성'.'수도직하 지진 대책 워킹그룹 설치 및 운영', '수도직하지진 시, '연합회 본부기능 이전 및 대체 대책 모색', (사)전국건설업협회의 '건설입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사업지속의 방법 전달 및 BCP작성 사례 발간 등이 있다.[16)]

③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BCP지원 시책으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은행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BCP내용·평가' 및 'BCM급부 및 융자 제도가 있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BCP책정 운용지침'에 의거해 작성된 BCP에 대해서 방재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설비·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회환경 대응 시 설정비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공조합중앙금고는 BCP책정 후, 사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자에게 설비자금·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재무리스크 매니지먼트·BCP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의 BCP 지침에 따른 융자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BCP 책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작성한 'BCP 책정 운용지침(입문, 기본, 중급, 상급 등 코스)'에 의거해 BCP를 수립해야 한다. 융자지원대상은 설비자금(시설의 내진 공사, 자가발전설비 설치, 창고 방화대책, 기계 고정 장치 설치, 데이터 백업설비 설치 등)과 운전자금(내진진단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대부한도액 및 대부이율은 중소기업사업일 때 융자한도액은 7.2억 엔(이중에서 운전자금 2.5억 엔)이며 대부이율은 설비자금의 경우 2.7억 엔까지는 기준금리(기준금리에서 0.65%)가 적용되며 그 이상으로는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4%이다. 한편 국민 생활사업의 경우는 대부한도액은 7.2천만 엔으로 금리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17)]

---

15)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81
16) 공익사단법인중소기업연구센터(2017), p.81
17) 중소기업청(2016), p.21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기업 방재 현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에 BCP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CP·BCM 책정에 관한 정부 관여도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방재 활동인 BCP·BCM은 대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BCP·BCM 책정에 관한 모든 직·간접적인 행정적·금전적 지원은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가이드라인(중소기업 BCP책정 운용지침)의 작성·제시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제산업국(経済産業局)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지원기업 선정·지원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BCP·BCM 책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칙조항은 없지만 모든 BCP·BCM과 관련된 행정 처리는 정부(중앙, 지방)가 담당·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 중소기업이 융자제도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BCP 책정 운용지침'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BCP·BCM을 수립해야 한다. 조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제산업국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재에 대해서 전사적인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론적·형식적이 아닌 실무적·실제적인 제도 설계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BCP·BCM 책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공급사슬 내부의 대기업으로부터 BCP·BCM의 책정을 요청받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BCP·BCM책정 여부가 거래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향후 BCP·BCM를 도입하는 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산업별 BCP·BCM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BCP·BCM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기업을 위한 BCP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지원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경련 등 그 외의 기업 관련 단체에서 BCP에 관한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BCP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기업재해 경감협회'가 있다. 기업재해 경감협회는 '재해경감을 위한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특수법인형태로 설립되었으며 기업재해 경감활동 전문교육의 운영 및 홍보, 자료조사·분석, 간행물의 발간,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업무가 주로 방재청과의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BCP의 관한 노력들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등 전체적인 지원이 미약하여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다.

현재 BCP·BCM는 B2B거래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사고 관련 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BCP·BCM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여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BCP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강조된다. 먼저 정부의 역할로는 BCP·BCM에 관한 정책수립부터 기업의 BCP·BCM 수립·이행까지의 활발한 민관 소통과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전문가의 정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정부, 기업, 국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해는 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별 행동전략을 마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각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 BCP를 수립·이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BCMS를 도입할 경우 기존 매뉴얼과의 상충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BCP를 정부의 BCMS와 어떻게 연계·융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70-80%는 중소 협력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 BCMS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CMS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안전 분야에서 전문가는 많으나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기업은 BCP·BCM책정·도입에 자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시간, 금전적 문제를 들어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임직원의 안전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과도한 교육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한국문헌>

가메이 가쓰유키·다카노 가즈히코(2012)「동일본대지진과 기업의 위기관리」『검증 3.11 동일본대지진』문출판사, p.332

국가법령정보센터(2016)「기업재난관리표준」, p.3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6.3.14.)「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김종호(2001)「위기에 대한 준비: Business Continuity Planing」『LG주간경제』, p.48

김종호(2003)「위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LG주간경제』, p.23
콘 마사카즈(2017)재난과 위기에 빛나는 지속가능경영』성안당, p.68
보안뉴스(2017.12.7.)
SAFE today(2010.4.6.)
송완범·김영근·전성곤(2014)『일본의 재해부흥인문사, p.57
에구치야스히로(2011)「동일본재해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위한 인문학적 모색』 고려대학교출판부, p.235
장동환(2017)『재난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율곡출판사, p.78
정상만(2016)「재난관리와 정책이슈와 방향」『국토 제417호』, p.98
정종수·김호영·송진국(2017)『재해경감활동관리론』신화, p.79
조아라(2013)「재해 부흥의 공간적 쟁점-미야기 현 새 도시를 중심으로」『현장에서 바라본 동일본대지진』한울, p.104
한국방재학회(2015)『재난관리론』구미서관, p.13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9호

<일본문헌>

上原修(2013)「自然災害を経験した日本の事業継続マネジメントの在り方-CSRを忘れたBCPは持続性に欠ける-」『ロジスティクス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p.47
神奈川県(2015)「中小企業BCP(事業継続計画)作成事例集」、p.57
経済産業省(2005)「事業持続性策定ガイドライン」、p.78
公益社団法人中小企業研究センター(2017)「中小企業の事業継続現状」、p.67
小林誠·服部誠(2012)『企業の地震対策Q&A 100』」日刊工業新聞社、p.176
高荷智也(2015)『中小企業のためのBCP策定』、nanaブックス、p.55
中小企業庁(2017)「BCP策定のためのヒント」、p.78
_____(2018)「中小企業支援ガイドブック」、p.68
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2016)「BCPの必要性と国の支援策について」、p.123
事業構想(2017)「防災ガイド」8月号
東京海上日勤リスクコンサルティング(2014)「企業の地震リスクマネジメント入門」日科技連
内閣府(2013)「事業継続ガイドライン」、p.154
内閣府(2016)「事業継続ガイドライン」第3版、p.354
日本経済新聞出版社(2016)『ケースでわかる災害対策』日経MOOK、p.134
日本政策金融公庫総合研究所(2013)「震災を契機とした中小企業のリスク対策への取組」、p.78
藤江俊彦(2009)「災害危機管理読本」日本コンサルタントグループ、p.87
本田茂樹(2018)「いままでなかった中小企業の防災マニュアル」労働調査会、p.98
山根義信(2013)『会社を守る防災マニュアルのつくり方』, マネジメント社、p.46
山村武彦(2012)「企業防災危機管理マニュアルのつくり方」金融財政事情研究会、p.68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2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일본 기업방재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김양태·임상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CP보급·확산을 위해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기업방재 현황과 BCP지원정책을 고찰·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 원인을 특정하고 생명·신체와 자산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재(防災)'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이후, 많은 기업이 피해를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한 공급사슬 단절 문제가 경영현안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은 지진과 해일(쓰나미)뿐만 아니라 원전의 방사선물질 유출과 전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면서 종래 '방재'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체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감재(減災, Disaster reduction)'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감재(減災)의 사고에 입각한 재해대책으로 사업지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사업지속계획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등장했다. 사업지속성계획(BCP)이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혹은 피해를 받아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행동수순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내각부, 중소기업청 등은 영미 기업들 사이에 도입된 BCP, BCM를 일본에 보급·확대를 위해 BCP 가이드라인이나 운용지침을 발표하여 방재의 측면만이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는 지혜가 몸에 배도록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에 의해 다양한 BCP책정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23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12월에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우리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사료된다.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y of the Corporate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Kim, Yang-Tae·Yim, Sang-Hyuk

This research is a study that exam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a disaster prevention country, and the BCP support polic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nd expanding BCP.

Japan's disaster measures were centered on "disaster" that specified causes of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eng shui and prevent damage to life, body and assets. However, since the 1995 Hanshin and Aaji earthquakes, the problem of cutting off supply chain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has emerged as a management issue as many companies experience damage. In particular, "disaster control"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as well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which caused huge losses to Japanese companies due to the leakage of radiation materials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power shortages, and thus led to a review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traditionally focuses on "disaster."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and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emerged as disaster measures based on the accident of the deduction. A Business Continuity Plan (BCP) is a methodology for maintaining the business continuity of an enterpri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hich presumes various risks that contribute to the disruption of the business so that they can be averted or quickly recovered from damage. Japan's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issued BCP guidelines or operating guidelines to distribute and expand BCP and BCM introduced among U.S. companies, sending messages to the body so that it is wise to keep the business afloat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not just from a disaster perspective. Japan has deployed various BCP-assigned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has made a lot of progress

The Act on Support of Self-Govern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Reducing Disaster was enacted on March 23, 2013, and the Industrial Accident Management Standards were prepared and in place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It is believed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hrough the Japanese case on what policies and support our company needs to actively engage in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